

요 약

제1장 서론

- 본 연구는 IMF 이후의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분석을 기초로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실태 조사 및 연구 방법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건설업통계연보, 건설업경영분석 등의 통계자료 및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중소 건설업 현황을 파악하였고, 전국의 2,000개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여기에 전국을 5개 권역(서울·경기, 충청, 영남, 경남, 전라)으로 나누어 개최한 간담회 결과를 참고하였음.

제2장 지방 중소 건설업 현황

- 2004년 말 기준으로 일반건설업체 수는 1999년에 비해 약 150% 정도 증가한 12,990개사로, 이중 서울업체는 16.5%인 2,144개이며 지방업체는 83.5%인 10,846개사임.
- 시공능력 순위 101위 이하인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지역별 수주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에 46.7% 수준이던 101위 이하 건설업체의 수주량 비율은 46.7%에서 2003년 55.5%로 증가하였다가, 2004년 다시 50.7%로 감소하였음.
 - IMF 이후 2003년까지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상황은 민간 경기, 특히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101위 이하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금액이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46.6%에서 2004년 57.1%로 증가하였으며, 1개사 평균 공공공사 수주금액은 1999년 24.8억원에서 2004년 14.1억원으로 40%이상 감소하였음.
- 시공능력순위 101위 이하 중소 건설업체의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수주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 6조7천억원 규모로 66%의 점유율을 보이던 것이 2004년 11조 4천억원 규모에 78%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민간공사의 경우 시공능력순위 101위 이하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량이 민간공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46.8%에서 2004년 46.6%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2002년 약 60%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3년 56.1%를 기록하여 하락하기 시작하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매월 발표하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의 수주물량 지수를 통해 2005년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상황을 추정해보면 2005년 들어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은 2~9월까지 수주물량 지수가 100을 초과하고 있어 전월에 비해 계속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 금년 들어 10월까지의 평균 물량지수가 43.7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금년 들어 학교공사 등의 BTL민자사업 대폭 확대, 재정 부족으로 인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대폭적인 축소, 턴키·대안입찰의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중소 건설업체의 주요 경영성과의 분석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건설업경영분석」의 주요 경영지표를 참고하였음.

- 우선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 추이를 보면 1999년 -1.7%이던 매출액증가율이 2000년에서 2003년까지 2002년을 제외하고는 10~20% 내외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2003년까지 누적·증가된 수주물량의 기성 증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정성 측면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익성 측면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1999년 -1.8%에서 2004년 5.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매출액경상이익률도 1999년 -11.1%에서 2004년 5.6%로 개선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제3장 중소 건설업 실태 조사

1. 실태 조사 개요

- 실태조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2005년 7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2004년 토건 시공능력순위 78위~2077위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조사대상 업체 중 조사에 응한 업체는 322업체로 응답률은 16.1%임.
- 실태조사에 응한 322개 업체 중 중기업(상시종업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45개 업체로 1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기업(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은 264개업체로 82.0%를 차지하고 있음.

2. 경영상태 및 전망

(1) 경영상태

- 중소기업체들의 현재 경영상태를 5년 전(2000년)과 1년 전(2004년)과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IMF체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시기에 비해서는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구체적으로 5년 전에 비해 경영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응답한 업체가 50.7%를 차지하고 있으나, 1년 전에 비해서는 24.8%만이 ‘개선된 것’으로 응답하여 25.9%가 감소함.
- 5년·1년 전과 비교하여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선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설업체 자율적인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라고 응답한 업체가 59.3%(5년 전과 비교), 68.6%(1년 전과 비교)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24.1%, 9.3%)’, ‘중점사업전환 및 다각화 추진(8.3%, 11.6%)’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2.7%, 3.5%에 그침.
- 5년·1년 전과 비교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된 이유는 5년 전과 비교해서는 ‘경쟁심화(77.9%)’가,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물량감소(37.1%)’가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됨.

(2) 경영성과

- 4년(2000년)·1년(2003년) 전과 비교한 2004년의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4년 전과 비교하여 ‘11%이상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62.1%로 나타나 ‘11%이상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인 22.3%를 크게 초과하여 중소기업체들은 전반적으로 4년 전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중소 건설업체의 수익성 측면을 나타내는 경상이익률의 변화를 보면 4년 전(2000년)과 비교하여 ‘1%이상 증가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5.4%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1%이상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도 31.5%로 조사됨.
- 중소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의 변화를 보면 4년 전과 비교하여 부채비율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42.9%로,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인 32.8%보다 높게 나타남.

(3) 건설경기전망

- 중소 건설업체들이 전망하는 향후 건설 경기 전망은 단기(1~2년내), 중장기(3년 이후)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단기 건설경기 전망은 ‘부정적(이하 매우 부정적 포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4.0%에 달하고 있음.
- 향후 건설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을 통한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응답한 경우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수요 창출(28.0%)’, ‘경제 활성화(16.0%)’, ‘건설 산업 구조개편(12.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중장기적으로 건설경기를 낙관하는 이유로는 ‘신수요 창출’로 인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31.5%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제도 발전’이 24.7%로 그 뒤를 이음.
- 향후 건설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소규모공사의 축소 및 BTL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중소 건설업체의 공사물량 축소’로 응답한 경우가 39.5%, ‘국가경제 회복 난망’으로 응답한 경우가 3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경쟁의 심화’로 인해 건설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8.9%로 조사됨.

(4) 경영상태 전망

- 향후 자사의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개선(이하 대폭 개선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경우가 36.0%로 ‘악화(이하 대폭 악화 포함)될 것’으로 응답한 경우인 30.3%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 중장기적으로는 경영 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단기보다 다소 증가하여 45.1%로 조사되었으나,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도 다소 증가하여 33.5%로 조사됨.
- 향후 경영상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단기, 중장기 모두 부정적인 건설 경기 전망에 대응하여 ‘자율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경영 상태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향후 경영 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경쟁의 심화’가 53.8%(단기), 46.9%(중장기)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물량 감소’가 28.6%(단기), 28.3%(중장기)로 조사됨.

(5) 경영애로 요인 및 극복 과제

-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은 물량부족으로 조사되었음.
 - 다음으로 ‘경쟁의 심화’로 응답한 경우가 11.0%,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침체’가 8.2%로 조사되었으며, ‘건설 산업 규제(3.5%)’,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미비(1.9%)’, ‘원가상승(1.6%)’ 등으로 조사됨.
- 현재의 경영 애로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건설업체 자율적인 과제로는 ‘영업력 강화’로 응답한 경우가 47.7%로 조사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업다각화’가 26.0%, ‘경비 절감’이 13.2% 등으로 나타남.
 - 주목할만한 것은 ‘인재 육성(3.3%)’, ‘기술 개발(2.3%)’ 등을 경영 애로 요인 극복과제로 응답한 경우가 매우 적게 조사됨.

- 중소 건설업체의 주요 경영 애로 요인인 건설 물량 부족과 경쟁의 심화를 극복할 정부의 정책 및 제도로는 전체 응답업체 중 51.3%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물량 확대'로 응답함.
- 어떤 형식으로든 공사 물량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업체의 약 74%에 이르고 있음.
- 향후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계약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3. 중소 건설업 관련 정책·제도

(1) 중소 건설 관련 제도

-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제도는 '지역업체 가산점 부과 제도'이며, 다음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지역제한입찰공사 확대', 「지방계약법」의 제정·시행·'조달청 등급별 입찰제도'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음.
-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제도는 'BTL사업의 확대', '턴키·대안공사의 확대' 등으로 조사됨.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작업이 한창인 「지방계약법」의 제정·시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이하 매우 긍정적 포함)'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경우가 응답업체의 63.6%로, '부정적(이하 매우 부정적 포함)'으로 예상하고 있는 경우인 4.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발주 물량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41.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 발전(29.9%)', '지역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시행(25.8%)' 등으로 조사됨.

- 부정적인 평가 이유는 현재 준비중인 「지방계약법」의 내용이 ‘중소 건설업체에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교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에 대한 BTL방식의 민자사업 확대는 예상대로 중소 건설업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BTL 방식의 민자사업 확대가 중소 건설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중소 건설업체의 물량 축소’라고 응답한 경우가 52.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중소 건설업체 참여가 불리’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2.0%로 조사됨.
-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신규 건설시장의 창출(36.7%)’, ‘정부 재정 부담 축소(26.7%)’, ‘민간 창의 반영(23.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직접시공의무제도에 대해서는 ‘중소 건설업체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9.2%에 달했으며,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7.6%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13.3%보다 높게 조사됨.
- 중소 건설업체들의 직접 시공비율을 조사한 결과 40~60%미만 직접시공하고 있는 응답한 비율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이상 직접 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35.8%에 달하고 있음.
- ‘지역제한입찰대상 공사’ 확대에 대해서는 80.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7%로 조사되었으며,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제도는 전체 응답업체의 86.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조달청 등급별 입찰제도는 65.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모두 중소 건설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터키·대안공사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51.2%로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4.8%에 달하고 있어 중소 건설업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제한입찰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조달청 등급별 입찰공사가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연간 공사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지역제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조달청 등급별 입찰 공사 비중

(단위: 개사, %)

구분	소계	지역제한 입찰공사	소계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	소계	조달청등급별 입찰공사
전체	289	58.4	285	17.7	285	18.7
서울	12	36.9	11	23.0	11	26.5
경기	32	51.0	31	19.6	32	20.6
인천	10	29.6	10	18.1	10	23.0
충북	23	68.6	23	14.4	23	14.9
충남(대전)	31	53.1	30	21.2	31	23.9
경북(대구)	57	57.0	56	17.9	56	18.9
경남(부산, 울산)	40	64.3	41	19.7	40	16.8
전북	10	64.2	9	20.3	10	9.5
전남(광주)	33	58.8	33	15.0	33	21.3
강원	22	76.5	22	12.4	21	12.4
제주	10	68.5	10	7.0	9	7.2
무응답	9	55.6	9	22.0	9	22.4

(2) 건설업 업역 제한 폐지

- 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겸업제한의 폐지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61.3%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찬성 의견을 제시한 경우인 25.5%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일반·전문간 업역 제한 규제의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중소 건설업체 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의 심화’와 ‘중소 건설업체들의 전문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38.6%로 같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16.5%로 조사되었음.
- 일반·전문간 업역 규제의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는 ‘건설 산업의 구조 개편’,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 ‘수익증대’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일반건설업체인 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규제가 폐지될 경우 전문 업종에 진출할 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문 업종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63.5%로 ‘진출하겠다’는 의견 36.5%보다 높게 나타남.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규제가 폐지될 경우 전문건설업종 진출할 경우 진출을 희망하는 전문건설업종을 조사한 결과 ‘토공사업(32.2%)’, ‘철근콘크리트공사업(15.8%)’, ‘시설물유지관리업(12.3%)’, ‘실내건축공사업(8.2%)’, ‘상하수도설비공사업(7.6%)’ 등의 순서로 조사됨.

(3) PQ적격심사 중 경영상태 평가

- PQ 및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 항목 중 적절하지 못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업체 중 20.1%가 ‘매출액순이익률’로 응답하였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9.2%, ‘부채비율’이 12.2%로 각각 조사되었음.

4. 기술 개발 및 자금 조달

(1) 기술개발

- 중소기업체들의 최근 3년 동안 기술 개발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191개 업체의 평균 기술 개발 실적은 0.3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충북 지역이 평균 1.5개로 기술 개발 실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유도할 정책 및 제도의 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을 주문한 경우가 전체의 48.0%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중소기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유도할 구체적 제도를 조사한 결과 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기술개발 실적의 각종 입찰심사에 반영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구체적으로 공사발주시 관련신기술 의무적인 설계반영 법제도화, 업체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개발정보공유, 기술개발 이후의 철저한 관리감독, 중소기업기술연구소 설립 (개별회사 연구소 통합), 중소기업체만을 위한 기술평가제도 도입,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기술개발관련 교육 및 세미나 제도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됨.

(2) 자금 조달

- 중소기업체의 평균 차입금의존도는 14.0%로 조사되어 중소기업체들의 차입금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전체적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10% 미만인 업체가 55.4%로 나타났고, 차입금 의존도가 0%인 업체도 28.5%에 달하고 있으며, 차입금의 의존도가 50% 이상인 업체는 2.8%에 그침.

- 중소 건설업체들의 주요 자금조달 방법을 조사한 결과 ‘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2.8%로 가장 높았으며, ‘공사대금’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41.4%로 조사됨.
- 다음으로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 ‘사채와 제3금융권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의 순으로 조사됨.
-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자금 조달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과거와 비교해서 조사한 결과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49.8%)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과거에 비해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43.3%로 조사됨.
- 금융기관 자금조달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는 그 동안 건설업계에서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해온 ‘물적 담보의 요구’로 조사됨.
- 다음으로 ‘대출한도의 부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제출 서류가 과다하다’, ‘수수료가 부담스럽다’ 등의 순으로 나타남.

5. 중점사업분야

- 현재 중소 건설업체의 중점 사업 분야를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인 ‘도로(교량터널 포함) 공사(24.4%)’가 가장 높게 조사됨.
- 다음으로 공공공사인 ‘학교시설(14.7%)’, ‘자재 아파트 사업(10.5%)’, ‘공용청사(7.45)’, ‘민간 도급 근린시설공사(4.3%)’의 순으로 나타남.
- 시공능력순위별 중점 사업 분야를 조사한 결과 순위가 높은 78~200위 업체들이 ‘자재 아파트 사업’을 중점 사업 분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공능력순위가 낮아질수록 공공공사 위주로 특히, ‘도로 공사(교량터널 포함)’를 중점 사업 분야로 응답한 경우가 많음.

-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 분야를 조사한 결과 현재의 중점 사업 분야와는 달리 ‘자체 아파트 사업’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비율이 22.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도로 공사(교량·터널 포함)’가 18.6%, ‘민간 아파트 도급공사’가 6.6%, ‘학교시설’이 5.8%, ‘자체 사무용빌딩분야’가 5.4% 등의 순서로 나타남.

제4장 육성 방안

1. 중소 건설업 정책의 기본 방향

- 정부는 건설한 업체가 시장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무자격 부실업체의 시장 참여를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중소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의 기초로 삼아야 함.
-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시행이 필요함.
 - WTO 등 국제 질서의 범위 내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주 기회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2. 지방계약법의 적극적 활용

- 내년부터 지방의 특성 및 상황에 맞는 공공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지방계약법」이 시행되는데, 이러한 「지방계약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차별성을 두어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쟁 요소 확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1) 발주 방식 및 발주 규모 검토 조항 신설

- 「지방계약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의 발주 방식을 결정하거나, 공사의 발주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지방 중소 건설업체를 배려하여 대·중소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을 검토하여야 함.

(2) 입찰우대(bid preference) 제도 도입·시행

- 「지방계약법」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쟁하는 경우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입찰우대 제도를 정책 수단으로 도입하여 대·중소 건설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3. 중소 건설업체를 배려한 정부 재정의 운용

- 정부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건설업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의 사정을 배려하여 재정을 운영하는 원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상황을 고려하여 민자 방식 또는 재정 투입 방식 등을 결정하고, 장기계속공사의 예산 배정 등에도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4. 중소 건설업체 기술 개발 유도 정책의 실시

- 중소 건설업체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건설 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는 정책을 펴거나, 중소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기술연구소를 운영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5. 사업다각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정부 차원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은 시기적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시행을 검토하여야 함.